

4

\*

홍성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논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4월혁명의 기억이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4월혁명의 기억이 제도화되는 가시적인 형태로서 기념사업의 역사와 성격변화에 주목해 지배권력과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억의 정치과정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한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4월혁명 기억의 제도적 확장은 기회라는 측면에서 혁명기억을 안정적으로 기념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준데 반해, 위기의 측면에서 사회운동의 기억투쟁을 제도화시킴으로써 동원전략의 강도와 효과를 분산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4월혁명의 기억운동은 제도화의 사회적 결과에서 발견되는 운동주체의 주변화와 기억의 정치적 독점 그리고 기념의 형식주의와 담론의 위기라는 제도화의 역설을 내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주요어: 4월혁명, 사회적 기억, 민주화와 제도화, 기념사업, 기회구조

\* 이 논문은 지난 4월 16일, 4월혁명 5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당시 토론을 맡아주셨던 이창언 박사님과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세 분의 논평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1. 서론

1990년대 이후 사회과학에서는 민주화운동을 과거형으로 서술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운동의 담론지형은 민중에서 시민으로, 계급에서 계층으로, 변혁에서 개혁으로, 국가에서 시장으로 새롭게 재편되었다. 그 결과 민주화운동은 더 이상 현재형이 아닌 “...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는 일정한 시대배경을 내포한 역사적 개념이 되었다.<sup>1)</sup> 그리고 오늘날 한국사회는 민주화운동을 과거 권위주의체제에 대항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고자 했던 민중들의 역동성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화운동을 과거의 시간들 속에서만 기억하지 않는다. 과거형의 민주화운동은 기념일의 기념식이나 추모의례 혹은 기념시위에 의한 ‘주기적 재현’과 기념의 공간 및 조형물과 같은 ‘일상적 재현’을 통해 현재의 지평 위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어왔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원초적 사건들을 현재의 지평 위로 불러내는 사회적 기억의 제도화된 여러 장치들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기념일과 기념식, 추모의례와 기념시위에서부터 기념관, 묘지 및 공원, 조형물, 학술연구, 출판 및 영상물 등에 이르는 다양한 기념의 형태들은 현재적 관점에서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사회적 기억과 역사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제도화한다는 것은 당대의 원초적 기억들을 제도

---

1) 공식적으로 정부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예관한법률」(2007년 제3차 개정)에서 민주화운동을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0년 제정된 이 법률은 2007년 제3차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민주화운동의 시작점을 ‘1969년 8월 7일 이후’로 규정해왔다. 한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민주화운동은 그 시기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적 장치들을 통해 사회적 기억으로 체계화·조직화한다는 것이며, 이는 곧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를 반영하는 사회적 과정이자 그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은 특정한 시간의 단일한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1960년 4월혁명,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0년 5·18민중항쟁, 1987년 6월민주항쟁 등 민주화 이전 시기 민주화를 목적으로 한 여러 사회운동들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민주화운동의 기억은 다양성과 통일성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 그렇다면 민주화운동의 시초로서 1960년 4월혁명의 기억은 어떻게 제도화되었는가?

이 글은 1960년의 4월혁명 ‘이후’ 혁명의 기억이 제도화되는 경로와 성격을 정치과정의 차원에서 탐색함으로써, 지배권력과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혁명의 기억이 현재의 지평 위에서 재구성되는 작동양식과 그 사회적 결과를 논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기념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4월혁명 기억의 제도화(이하 4월혁명의 제도화)’를 논의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인식론적·학문적 문제의식에 기대고 있다.

인식론적 측면에서 사회적 기억의 제도화가 원초적 기억의 체계화와 조직화 과정을 통해 건인된다고 이해할 때, 4월혁명의 제도화는 혁명 기억을 둘러싼 국가와 시민사회의 정치과정 변화를 설명함으로써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 이전 4월혁명의 제도화가 국가와 시민사회의 구조적 긴장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민주화 이후에는—민주화 이전의 종속적·대립적 관계를 벗어나—‘구조적 긴장의 틀’ 밖에서 제도적인 확장을 통해 변형된 정치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렇게 해서 4월혁명의 제도화는 국가-시민사회의 긴장-탈(脫)긴장의 ‘정치과정’이 복합적으로 축적된 일련의 제도적 산물들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4월혁명에 관한 기억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형태로서 기념사업의 역사와 성격변화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주화운동으로서 4월혁명을 둘러싼 기념사업의 역사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정치과정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학문적 측면에서, 4월혁명의 제도화는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연구영역 확장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게 만든다. 특히 '4월혁명'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동기를 제공한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50여 년간 '4월혁명'을 다룬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4월혁명에 대한 학술적 접근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4월혁명의 운동사적 접근이다(김성환 1984; 박형신 1986; 김광식 1988; 김동춘 1988; 1991; 박현채 1988; 이철국 1988; 사월혁명연구소 1990; 1993; 이종오 1991; 서중석 1991). 이들 연구는 4월혁명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배경과 다양한 운동세력들의 동학에 초점을 두었다. 둘째, 4월혁명의 정치사적 접근이다(한승주 1983; 고성국 1991; 김일영 1991; 최장집 1996; 이재봉 1996; 김수진 1996; 박명립 1996; 김영명 1999; 문병주 2005). 4월혁명의 정치사적 성격을 분석한 이들 연구는 4월혁명 직후의 급격한 정치변동에 집중했다. 셋째, 4월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실천적 함의를 재조명하는 논의이다(백낙청 1980; 강만길 외 1983; 강정구 1998). 이러한 논의들은 '미완의' 4월혁명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족사적 과제들을 현재적 맥락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무게를 두어, 4월혁명의 정신을 현재화해 실천적으로 계승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4월혁명을 제한된 연구지평의 틀 안에 가두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했던 것 같다. 그 이유는 기존의 연구들이 대체로 규범적 관점에서 운동사 중심의 서술방식을 지향해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4월혁명의 정치적 성격을 이념 중심적 변혁이론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당대의 혼란했던 정치적 상황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주화운동의 사회적 결과를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논의할 것인가에 관한 학문적인 고민이 채 형성되기도 전에 민주화 이후 사회운동의 급격한 자기변형을 설명해야 했던 당대의 긴급한 과

제들에 직면했던 탓이 컸던 것 같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민주화운동을 ‘기억의 정치’, ‘기념사업’, ‘의례화’라는 주제어를 통해 새롭게 접근하려는 연구들이 제출되기 시작했다(정근식 1999; 2005; 정호기 2004; 2005; 2007). 추모의례와 기념공간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을 기억과 기념의 정치라는 맥락에서 분석한 이들 연구는 민주화운동의 기억이 어떻게 제도화되는지에 새로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글은 4월혁명 이후 50여 년간 축적된 학문적·실천적 자원들에 기대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첫째, 4월혁명의 기억이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4월혁명의 기념사업 구조에서 나타나는 유형적 특성과 쟁점은 무엇인가? 셋째, 4월혁명의 기억이 제도화되는 정치과정과 동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넷째, 4월혁명 기억의 제도화가 가져온 사회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글은 4월혁명의 기억이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를 분석적으로 탐색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여 혁명기억의 사회적 결과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한다. 4월혁명의 기억운동은 제도화의 역설로 특징지어지는 운동주체의 주변화와 기억의 정치적 독점 그리고 기념의 형식주의와 담론의 위기라는 비판적 쟁점을 내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기억의 민주화 없는 제도화는 형식의 과잉과 기억의 정치적 독점을 불러일으키며, 제도화 없는 민주화는 기억의 불안정성과 담론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미완의 혁명으로서 4월혁명’은 기억의 민주화를 통해 역사적 완결성을 채워가야 한다.

## 2. 사회적 기억의 제도화

### 1) 기억의 정치적 동원과 제도화의 경로

과거의 경험을 현재적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은 ‘사회적 기억’에 의존하기 마련이다.<sup>2)</sup> 사회적 기억은 본질적으로 과거의 구성물이며,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전망하는 데 언제나 유용하기 때문이다.<sup>3)</sup> 이러한 과거의 현재화 작업을 통해 “과거의 실재성은 더 이상 과거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Halbwachs 1971; Schwartz 1982, 376). 과거의 실재성은 누가, 왜,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의미화 실천(signifying practice)을 통해 현재적 맥락에서 재해석될 뿐이다(Eyerman 2004). 결국 사회적 기억은 변화하는 사회적 이해관계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지고 재조형됨에 따라 하나의 ‘사회적 사실’이 된다(Schwartz 1996, 909).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기억을 원초적 사건으로서 단순히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사회적 기억이 구성되는 방식과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정치적 기획에 관해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Burke 1989).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회적 기억에 관한 연구가 제공하는 ‘기억의 정치(politics of memory)’라는 중요한 통찰

---

2) 사회적 기억에 관한 논의는 사회학, 역사학, 정치학, 문화비평, 인류학, 심리학, 예술사 등의 분과학문 영역을 가로질러 담론의 복잡한 연쇄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담론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회적 기억에 관한 연구는 “패러다임에 구애받지 않으며(nonparadigmatic), 분과학문의 경계를 초월하며(transdisciplinary), 중심점 없는(centerless)” 작업을 통해 축적되어 왔다(Olick and Robbins 1998, 105). 이는 사회적 기억에 관한 연구가 기존의 풍성한 사례연구에 비해 왜 방법론적 기반이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3) 이런 맥락에서 알론소(Alonso 1988, 33)는 “사회적 기억이 사회적 의미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이며, 과거의 재현은 사회집단과 사회적 정체성의 상징적 구성에 중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억을 통제하는 것은 정치권력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던 허쉬(Hirsch 1995, 23)는 과거는 언제나 현재에 인식된 중요성들로부터 구성되고, “과거의 이미지가 현재의 사회질서와 정책을 정당화한다”는 의미에서 기억은 일반적으로 정치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했다.

에 의존하게 된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억이 구성되는 방식과 그 정치적 기획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데 핵심적인 주제어는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이다. 과거의 사회적 재구성이란 맥락에서 기억을 “문화적 실천행위이자 그 실천에 의한 구성물”(김영범 1998, 166)이라고 정의할 때, 그것을 가능케 하는 물적 토대는 제도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제도화는 공식적 혹은 법률적인 허가에 의해 뒷받침되는 목적과 규칙들의 견고하고 안정된 장치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제도라는 규범적·법률적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성은 보장하는 한편, 제도의 외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하는 사회질서의 구조화 메커니즘을 이끌어낸다. 다시 말해 사회적 기억의 제도화는 선택의 논리에 의해 개인과 조직의 기억을 일정한 제도적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공유하게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은 기억에 대해서는 배제의 논리를 작동시켜 ‘사회적 망각’을 유도한다. 모든 기억이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동질성을 유지하며 동일한 시공간과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한, 기억이란 다분히 선택적이고 배제적인 논리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억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며, 특히 사회적 차원에서의 기억은 사실 그 사회가 선택하고 만드는 것”(안병직 2005, 29)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기억이 어떤 특수한 구조적 맥락에서 제도화되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치사회학적 시각에서 볼 때, 사회적 기억의 제도화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구조적 경로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다. 첫째, 지배권력의 정치적 필요에 의한 ‘위로부터의 제도화’이다. 여기에서 기억은 사회통제를 위한 정치적 매개로서 기능하며, 과거나 전통은 지배권력이 헤게모니적 정당성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고안물이 된다(Alonso 1988; Hobsbawm 2004). 하지만 위로부터 제도화된 사회적 기억은 지배권력의 헤게모니가 약화되거나 대항헤게모니에 의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증보와 개정작업을 통해 제도적 자기변형을 도모해야 한다.

위로부터 제도화된 사회적 기억이 성공적인 헤게모니를 위해 기능하기 위해서는, 하비 케이(Kaye 2004, 112)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논란 및 논쟁 거리를 제공하고 자극하는 열망을 중립화하고 흡수하며 주변화하고 억압함으로써 봉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억이란 투쟁에 있어서도 실제로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억을 통제한다면 그들의 역동성 또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Foucault 1977). 이런 측면에서 위로부터 제도화된 사회적 기억은 헤게모니 프로젝트에 의한 선별과 포섭전략을 함축하는 ‘국가의 기억’ 이 된다.

둘째, 사회적 기억을 ‘아래로부터 제도화’ 하는 구조적 경로가 있다. 여기에는 지배권력의 정치적 기획에 의해 가공되거나 왜곡된 과거의 기억을 아래로부터의 관점에서 복원하려는 기억투쟁의 ‘대항적 제도화’와 풀뿌리 수준에서 공유된 역사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자율적 제도화’가 있다. 기억의 대항적 제도화가 주로 정치투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된 반면, 자율적 제도화는 공동의 이해관계나 자조적 성격을 갖는 지역적·집합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적 기억이 공식적·안정적으로 아래로부터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열려진 기획의 정치공간이 작동하고, 동시에 사회운동 혹은 기억집단의 세력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헤게모니 프로젝트에 의해 위로부터 관제적 제도화의 압력이 상승하고 아래로부터의 제도화를 추동하는 사회세력들이 기억의 재현을 통한 비판적 긴장의 균형을 잃게 될 때 제도화의 내용과 성격은 변화되기 쉽다.<sup>4)</sup> 결국 사회적 기억의 제도화가 어떤 구조적 경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기원에 주목하는 것만큼, 제도화의 내용과 성격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

4) 이런 점에서 ‘5월행사’ (정근식 2005)와 ‘추모의례’ (정호기 2007)의 사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국가의 헤게모니 프로젝트가 작동하고 국가차원의 기념사업 범위가 민주화운동에 까지 확장되면서 아래로부터 제도화된 ‘운동의 기억’을 문화적으로 재현하고 의례화하는 내용과 성격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 앞의 두 가지 제도화 경로가 국가와 시민사회라는 행위자·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치기획의 산물이라면, 이러한 정치기획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구조적 조건으로서 ‘정치적 민주화’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 이전에 반공·민족·권위주의적 지배담론이 국가 주도의 관제기억을 중심으로 위로부터 사회적 기억의 제도화를 주도해왔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국가의 헤게모니 프로젝트 성격변화와 함께 시민사회의 담론지형이 확장되면서 사회운동의 기억투쟁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기회의 구조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즉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규모와 범위의 측면에서 사회적 기억의 제도화가 심화·확장되었다.<sup>5)</sup> 이러한 사회적 기억의 제도화를 가시적인 형태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이다.

그런데 기억의 제도화가 기념(commemoration)의 형태로 구체화되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상징’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상징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부여되는 가치 혹은 의미로 이해된다(White 1940, 435; Elder and Cobb 1993, 52-54).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자면, 상징이란 사물이나 현상 혹은 인물과 같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 의미, 가치,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그 대상에 내재된 추상성을 일정한 형태로 구체화시키는 표현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상징화 과정은 기억의 문체와 마찬가지로 누가, 무엇에서, 왜 특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정치적인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상징이라는 문화적 언어를 통해 내면화된 특정한 의미와 가치는 정치적 도구의 성격을 갖게 되며, 이 같은 정치적 상징은 사회적 기억을 둘러싸고 형성된 기념의 행위와 구조에 반영되어 나타난다.<sup>6)</sup> 그리고 특정한 기념의 형태들에 투영된 상징적 의

5) 이 같은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과거청산 혹은 진상규명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기억의 제도화는 민주주의의 발전이 가져온 외연적 확장과 궤를 같이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정근식 2002; 김영범 2003).

미와 가치들은 불규칙적으로 편재된 사회적 기억을 정렬시킴으로써 제도적으로 틀지어진 구조 안에서 학습과 교육을 통한 과거의 전승을 가능케 하는 기억장치로 기능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념사업은 일정한 상징체계를 매개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함으로써 역사적 경험의 재해석과 과거를 기억하고 전승하는 방식을 제시해준다.

## 2) 기억의 정치과정과 기회구조

앞서 논의했듯이, 사회적 기억의 제도화는 기억의 주체, 대상, 방식에 따라서 그 정치적 맥락과 성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억의 제도화가 구조적으로 수렴되는 맥락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정치기획들,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결과를 ‘기억의 정치과정과 기회구조’라는 문제틀을 통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운동 연구의 정치과정론에서 발전해온 ‘기회구조(opportunity structure)’에 관한 논의들은 사회적 기억이 어떤 구조적 기회를 통해 정치과정을 이루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제도화되는지, 그 구조적 조건과 동학 그리고 사회적 결과를 규명하는 데 유익할 수 있다.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는 사회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서 구조적 조건을 설명하는 데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다. 물론 정치적 기회구조 모델은 그것의 개념화, 측정방법, 논박가능성, 결과 등과 관련해 비교적 오랫동안 폭넓은 논쟁이 있었다(Goodwin and Jasper 1999; Koopmans 1999; Kriesi 2004; Meyer and Minkoff 2004).

---

6) 사회적 기억의 상징화된 형태로서 기념에는 대표적으로 전기, 기념비, 기념일 제정, 집단묘지, 유적지, 조각상, 그림, 출판물, 의례적 의식 등이 포함되는데, 슈워츠와 슈만(Schwartz and Schuman 2005, 185)에 따르면 기념이 과거 실제 역사기록물들의 가치를 상징화할 때 그것은 지적으로 강제적인 성격을 갖게 되며, 역사는 그럴듯하게 기념될 만한 사건으로 기록될 때 도덕적·정서적으로 강제된다.

게다가 사회운동의 외생적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운동 환경의 모든 측면들을 흡수하는 스펀지의 위험”(Gamson and Meyer 1996, 27)에 놓이게 되었다는 경고마저 제기되기도 했다. 정치적 기회구조가 이 같은 논쟁적 이슈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그 기본 전제가 담고 있는 구조결정론적 지향성과 사회운동의 지속성 및 결과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치적 기회구조 모델은 사회운동의 발생과 동학에 관한 구조적 유인기제를 설명하는 데 유익하며, 이는 기억의 정치과정을 설정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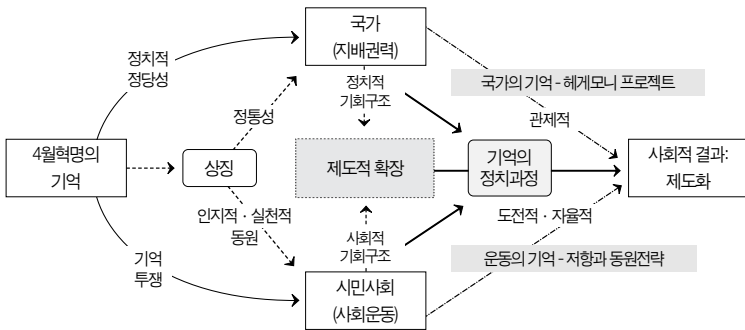
정치적 기회구조의 기본 전제는 사회운동을 둘러싼 외생적 요인들이 운동의 동원전략, 주장, 영향력 등을 제고시키기도 하고 때론 억제한다는 데 있다. 정치적 기회구조를 구성하는 핵심사안을 살펴보면(McAdam 1996, 27), ①제도화된 정치체계의 상대적 개방성 혹은 폐쇄성, ②엘리트 동맹의 존재 여부, ③정체 내부에 존재하는 광범한 엘리트 동맹의 안정성 또는 불안정성, ④국가의 역량과 억압의 정도가 있다. 이 같은 정치적 기회구조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억의 제도화가 위로부터 이루어지는 구조적 맥락을 다음과 같이 가설적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다. 첫째, 제도화된 정치체계가 상대적으로 개방적일수록 사회적 기억의 제도화는 심화·확장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즉 제도화된 정치체계가 폐쇄적일수록 사회적 기억은 왜곡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낼 것이다. 둘째, 정체 내부에 민주세력의 동맹이 존재할 경우 위로부터의 사회적 기억의 제도화는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성격을 갖는다. 셋째, 정체 내부에 존재하는 민주세력의 동맹이 안정적일수록 운동의 기억은 제도의 영역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다. 넷째, 국가의 억압 정도가 강할수록 원초적 사건에 대한 운동의 기억은 저항과 동원의 전략으로 발전할 것이다.

한편, 정치적 기회구조가 사회적 기억을 제도화하는 외생변수, 즉 구조적 유인 및 통제기제로서 작동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면, ‘사회적 기회구조(social opportunity structure)’는 사회적 기억을 둘러싼 아래로부터의

담론환경과 운동지형을 고찰하는 데 유익할 수 있다.<sup>7)</sup> 여기에서 사회적 기회구조란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담론환경과 운동지형의 기회(chance)와 위기(crisis)를 동시에 내포하는 이중적 가능성의 구조화된 틀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시민사회의 성장과 운동중심적 분화가 새로운 담론환경과 운동지형의 열린 기회구조를 제공하지만, 이념적 길항에 따른 담론질서의 폐쇄성과 운동조직들 간의 분화와 경쟁은 위기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기회구조가 개방적으로 확장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운동의 기억들이 아래로부터의 담론환경과 운동지형의 구조적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기억은 결국 국가의 기억이 주도하는 관제적 제도화의 길로 인도되기 쉽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확장된 정치과정의 공간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와 위기의 이중적 가능성은 4월혁명 제도화의 사회적 결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림 1〉은 앞서 논의한 이론적 자원들을 ‘기억의 정치과정과 기회구조’라는 맥락에서 재구성해 4월혁명의 기억이 제도화되는 경로와 성격

〈그림 1〉 4월혁명 기억의제도화경로



7) 홍일표(2007)는 사회적 기회구조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며, 운동세력들 간의 기본적인 관계가 지지와 협력적인 경우, 적대적·경쟁적인 경우 등 운동지형의 구조와 변동은 사회운동의 전개과정과 그것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천착해 시민입법운동을 분석했다.

을 탐색하기 위해 고안한 설명모델이다.

### 3. 기념사업의 유형적 특성과 쟁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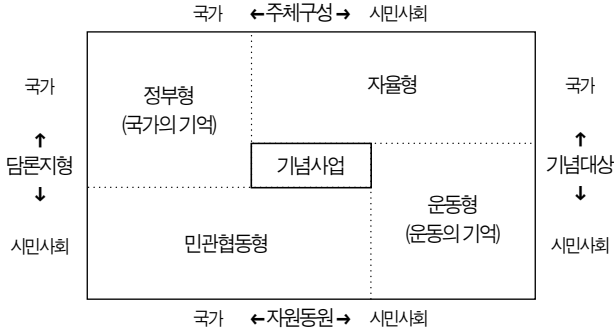
과거의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들을 잊지 않고 전승하기 위한 수많은 기념사업들이 있다. 기념사업은 대체로 기념의 대상에 상징성을 부여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계승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기념의 행위와 구조를 둘러싼 구성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다음의 <그림 2>는 기념의 행위주체와 자원의 동원구조 그리고 사회적 기억의 담론지형과 기념대상의 성격에 따라 기념사업을 유형화한 것이다.<sup>8)</sup> 즉 기념사업(에) 누가 주도(참여)하는가,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는가? 사회적 기억의 담론지형을 이루는 영역과 기념의 대상이 국가적인가, 시민사회적인가? 이러한 물음들을 중심축으로 기념사업의 공동체와 성격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기념사업들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보편적인 형태는 정부형 기념사업이다. 정부형 기념사업은 사업의 주체구성과 자원동원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기억의 담론지형과 기념의 대상에 민족-국가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예컨대 독립운동과 한국전쟁 관련 기념사업들은 국가차원에서 특화된 정부형 기념사업으로서 민족주의와 반공주의를 불러내 사회통합과 정치적 위기관리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

8) 정호기(2004, 234-241)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원초적 사건의 주요 배경이 되었던 지역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경향을 보이며, 기념사업에 다양한 세력들과 집단들이 개입한다는 점에 중요성을 두어 기념공동체를 크게 '국가주도형', '민관협의형', '민간부문주도형', '지역연합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본 논의에서 이들 유형은 민관협동형의 세부적인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 기념사업의 구성적 특성에 따른 유형화



장치로 가능한 면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문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국가차원의 기념사업 구조가 확장되어 민주화운동, 특히 ‘4월혁명’과 ‘5·18민중항쟁’이 국가기념의 대상으로 적극 편입되기 시작한 것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국가차원에서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권위주의적 국가에 대한 항거와 희생 및 집합적 죽음이 지닌 상징성, 이를 기억하려는 사람들의 존재와 의례투쟁,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민정부의 등장이라는 ‘정치적 기회구조’ 등이 존재 및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정호기 2004). 실제로 문민정부는 자신의 권력기반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불타는 열망과 거룩한 희생”<sup>9)</sup>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며, 민주화운동의 상징성과 역사계승의 의지를 기존 정권과의 차별적 정통성으로 삼았다. 이런 배경 아래 추진된 대표적인 기념사업이 바로 「4·19묘역 성역화 계획」이다.<sup>10)</sup> 문민정부 출범 직후인 1993년에 추진된 이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9) 1993년 2월 25일, 〈제14대 대통령 취임사〉.

10) 정부는 「4·19묘역 성역화 계획」을 “4·19혁명의 민주이념을 승화시켜 민주발전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자율형 기념사업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기념하는 형태이다. 대표적으로 ‘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1991년)’,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1992년)’, ‘장준하기념사업회(199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2005년)’ 등이 자율형 기념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들 기념사업공동체는 대체로 비영리적 활동이 중심적이며, 기념관 건립, 공원조성, 학술행사, 문화공연, 그리고 장학재단과 같은 교육사업 등을 운용한다. 담론지형과 기념의 대상이 국가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념사업들이 자율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기념사업에 대한 참여의 자율성 그리고 사업기획과 자원동원의 높은 민간의존성에 있다.

셋째, 운동형 기념사업은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운동지형에서 지속적으로 복원함으로써 인지적·실천적 동원을 이끌어내는 사회운동의 대표적인 동원전략 장치이다.<sup>11)</sup>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분수령으로 해마다 전국적인 대규모 기념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났는데, 이 대목에서 운동형 기념사업은 특히 ‘죽음’을 상징화하는 추모의례의 방식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집합적 기억의 형성과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민주화운동에서 죽음의 의미는 국가폭력에 의한 대단히 극단적인 동시에 집단적인 희생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추모하는 의례는 “가족과 친족 내의 평범한 추모행사가 아니라, 국가 및 지배권력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부정하는 정치적 특성을 띠면서 ‘의례투쟁’이라는

---

과 국민화합에 기여도록 하고 묘역을 민주화 성지로 가꾸어 4·19정신을 길이 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11) 대표적으로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1986년), ‘민족민주열사희생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1990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회의’ (2006년) 등이 운동형 기념사업을 전문적으로 견인해가는 기념사업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사회운동으로(정근식 1999; 정호기 2004, 232)”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sup>12)</sup>

그러나 운동형 기념사업은 민주화 이후 점차 실천적 동원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민주화 이전에 운동형 기념사업이 ‘의례투쟁=사회운동’ 이라는 등가적 의미를 중심으로 형성·발전해왔다면, 민주화 이후 특히 문민 정부에 의한 정치적 기회구조의 형성과 시민사회의 담론환경 및 운동지형의 성격변화는 자연스레 ‘의례방식을 통한 투쟁’의 규모와 강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민주화운동의 상징체계가 동원의 지속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구조적 제약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기념시위의 문화마저도 현저하게 축소되면서, 운동형 기념사업은 ‘운동에서 제도로’ 그 성격이 급속히 전환되었다.

넷째, 민관협동형은 정부형과 운동형 기념사업의 절충적 형태로서 기념사업의 주체구성과 자원동원에 있어 정부가 공식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민관협동형은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에 대한 국가의 기억 범위가 제도적으로 확장되고, 동시에 과거사를 둘러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출현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출현한 대표적인 기념공동체들이 바로 ‘5·18기념재단(광주, 1994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1989년)’의 후신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 1994년)’, ‘3·15의거기념사업회(마산, 1995년)’,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대구, 2001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서울, 2001년)’ 등이다.

여기서 민관협동형이 기념사업에 참여하는 주체의 구성과 자원동원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편차를 보인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정호기(2004, 236-237)의 논의에 따르면, ‘5·18기념사업’은 민관협회의 구조를 갖고 있음에 반해, ‘부마항쟁 기념사업’은 민간부문의 주도성이 강력

---

12) 2009년 현재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민주화운동 관련 열사추모(기념)공동체는 60여 개에 이른다.



하게 관철되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와 대조적으로 ‘3·15의거 기념사업’은 강한 지역적 연대를 기반으로 처음부터 지역중심의 기념사업에 목적을 둔 기억투쟁의 형태로 결성되었기 때문에 기념공동체로서의 단일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앞서 시도한 기념사업의 유형화 논의는 4월혁명의 기억이 제도화되는 정치과정의 맥락에서 여러 쟁점들과 만나게 된다. 특히 4월혁명 기념사업의 다양한 형태들에 관한 논의는 기억의 정치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변화하는 관계를 읽어내는 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그것은 혁명기억의 지역적·조직적 분화와 제도화의 경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구체화된다.

## 4. 4월혁명 제도화의 정치과정

### 1) 혁명기억의 지역적·조직적 분화

주지하다시피 4월혁명은 전국적 규모의 민주화운동이었다. 동시에 4월혁명은 지역적 수준의 민주화운동들이—운동의 주체뿐만 아니라 시공간적인 측면에서—연쇄구조를 이루어낸 결과이기도 했다. 대구의 ‘2·28 민주운동,’ 마산의 ‘3·15의거,’ 당시 풀뿌리 수준에서 지역적으로 발생했던 혁명전야의 시위들,<sup>13)</sup> 그리고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규모의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4월혁명의 연쇄구조는 혁명의 기억이 지역적·조직적 수준으로 분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맥락에서 4월혁명 ‘이

---

13) 대표적으로 고려대 학생 시위(18일), 청주 고교생 시위(15일), 부산 고교생 시위(15일), 전주·창녕·하동 등 각 도시 민주당원 시위(17일), 마산 민주당 간부·고교생, 경남대 학생 시위(11일) 등이 있었다. 지역적 수준에서 발생한 이 시위들은 4월 19일을 발화점으로 전국적 규모의 시위로 확대되었다.

후' 4월혁명의 기억이 지역별로 다양한 기념사업의 형태로 제도화된 원인을 4월혁명의 지역적 구성에서 찾을 수 있겠다. 그리고 4월혁명의 기념사업이 지역기반의 형태로 전개되어온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표 1〉 참조).

무엇보다도 4월혁명 기념사업의 역사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기념탑과 추모비'의 건립이었다. 대구, 마산, 부산, 그리고 광주에서는 각각 '2·28의거 기념탑'(1961년), '3·15의거탑'(1962년) 그리고 '4·19희생자 위령탑'(1961년), '4·19의거 희생영령 추모비'(1962년)를 건립하면서 기념사업의 시초를 이루었다. 하지만 2·28기념탑과 4·19희생자 위령탑<sup>14)</sup> 그리고 4·19의거 희생영령 추모비가 시민들의 성금으로 세워진데 반해, 마산의 3·15의거탑과 서울의 4·19기념탑은 국가차원에서 건립되었다. 이 시기 박정희에 의해 추진된 4월혁명의 기념사업은 쿠데타를 통한 국가권력의 장악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채 식지 않은 혁명의 열기에 정치적 화상을 입지 않기 위한 일종의 포섭전략으로 해석된다. 박정희는 일시적이거나 3·15의거와 4·19혁명 기념사업을 주도하며, 5·16쿠데타를 4월혁명의 연장으로 그리고 정치적 정당성과 정통성의 명분으로 이어붙일 수 있었다.

둘째, 이들 지역기반의 기념사업은 1970~80년대의 시간적 공백을 깨고 1990년대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특히 문민정부의 출범과 궤를 같이 하여 본격화되었다. 문민정부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거청산과 진상규명의 사회적 요구에 따른 정치적 유연성을 보였다. 4월혁명과 5·18민중항쟁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조명 작업을 계기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문민정부는 1993년

---

14) 부산의 '4·19희생자 위령탑'은 혁명 이듬해인 1961년 『국제신문』의 진신인 『국제신보』가 시민모금운동을 벌여 용두산 공원에 조성되었다. 그리고 2007년 2월 15일 민주공원으로 이설했다.

〈표 1〉 4월혁명 기억의 지역적 분화: 기념사업을 중심으로<sup>15)</sup>

| 4월혁명의 지역적 구성                 |          | 주요 기념사업의 현황                  | 시기       |
|------------------------------|----------|------------------------------|----------|
| 2·28민주운동                     | 대구       | 2·28의거 기념탑 건립                | 1961. 4  |
|                              |          | 2·28기념사업회 발족                 | 1990. 2  |
|                              |          | 경북고 내 2·28기념조각 설치            | 1991. 5  |
|                              |          | 대구고 내 대고탑 건립                 | 1991. 10 |
|                              |          | 경북사대부고 내 2·28기념조형물 설치        | 1992. 2  |
|                              |          | 『2·28민주운동사』 출판기념회 및 국제학술대회   | 2000. 2  |
|                              |          | 2·28기념탑 표지석 설치               | 2004. 2  |
| 2·28기념중앙공원 개장                | 2004. 4  |                              |          |
| 대구광역시 『2·28민주운동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 | 2005. 12 |                              |          |
| 3·15의거                       | 마산       | 3·15의거탑 건립                   | 1962. 7  |
|                              |          | 3·15기념회관 건립                  | 1962. 9  |
|                              |          | 3·15의거 마산시 기념일 제정            | 1993. 7  |
|                              |          | 3·15의거 기념사업회 창립              | 1993. 10 |
|                              |          | 3·15의거 성역화 사업계획 추진           | 1994. 4  |
|                              |          | 3·15의거탑 석등 건립                | 1995. 3  |
|                              |          | 3·15상징테마공원 개장                | 1999. 12 |
|                              |          | 국립3·15묘지 준공                  | 2003. 3  |
|                              |          | 3·15의거 도기념일 제정               | 2003. 12 |
|                              |          | 3·15아트센터 개관                  | 2008. 5  |
| 3·15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 2010. 3  |                              |          |
| 4·19혁명                       | 광주       | 4·19의거 희생영령 추모비              | 1962. 4  |
|                              |          | 4·19탑 건립추진위원회 설립             | 2000. 5  |
|                              |          | 광주고 내 광주4·19혁명 발상 기념탑 건립     | 2002. 4  |
|                              |          | 광주4·19혁명기념사업위원회 창립           | 2004. 5  |
|                              |          | 광주고 내 4·19기념 사비 설치           | 2006. 4  |
|                              |          | 4·19기념회관 완공                  | 2008. 2  |
|                              |          | 4·19민주로 신설                   | 2008. 4  |
| 광주4·19사적지기념탑 건립(광주고 정문 앞)    | 2009. 4  |                              |          |
| 4·19혁명                       | 부산       | 4·19희생자 위령탑(2007년 민주공원으로 이설) | 1961. 4  |
|                              |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창립               | 1994. 10 |
|                              |          | 민주공원 개장                      | 1999. 10 |
|                              |          | 4·19광장 조성 및 혁명 희생자 영령불안소 건립  | 2007. 2  |
| 4·19혁명                       | 서울       | 4·19묘지 준공 및 기념탑 건립           | 1963. 9  |
|                              |          | 4·19기념시설도서관 개관               | 1964. 5  |
|                              |          | 국립4·19민주묘지(4·19묘지의 확장 및 재형성) | 1995. 4  |
|                              |          | 국립4·19민주묘지 내 혁명기념관 개관        | 1995. 4  |
|                              |          | 4·19혁명기념도서관 개관               | 2000. 8  |

15) 여기에서 제시한 자료들은 주로 신문기사와 각 기념사업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추출해 재구성한 것이다.

10월부터 시작되어 1995년 4월에 마무리된—총 공사비용 150억 원의—‘4·19묘역 성역화’ 사업을 통해 묘역을 확장하고 여러 상징조형물과 기념관을 건립했다.

셋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기념사업공동체와 지방정부 사이의 긴밀한 연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의 경우 2005년 시청으로부터 「2·28민주운동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시장이 공동의장직을 맡고 있다. ‘3·15의거기념사업회’는 1993년 창립부터 2008년—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개관한—3·15아트센터로 이전하기까지 마산시의회 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으며, 1993년에는 3월 15일을 마산시 기념일, 2003년 도기념일 지정, 그리고 2008년부터 마산출신 국회의원들을 주축으로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활동을 추진해온 결과 2010년 3월 국가기념일 제정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지역기반의 기념사업공동체들은 1990년대로 접어들어 확장된 제도적 공간을 통해 민관협동형의 형태로 제도화되면서 4월혁명의 운동성과 지역성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기념사업을 활성화시켰다.

한편 4월혁명의 경험과 원초적 기억은 조직적인 차원에서 분화·제도화되기 시작해 다양한 유관단체들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4월혁명 직후 서울을 중심으로 ‘4월혁명유족회’, ‘4월혁명동지회’, ‘부상동지회’, ‘의혈동지회’, ‘상이학생동지회’, ‘불구학생동지회’가 공식적으로 결성되었으며, 부산과 광주에서도 동지회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현재 4월혁명 관련단체들은 분화와 통합을 거듭해 <표 2>와 같이 전국적으로 20여 개가 넘는 단체들이 공식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가장 대표적인 단체로는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그리고 ‘4·19혁명공로자회’가 있다.<sup>16)</sup> 민관협동형에 속하는 이들 단체

---

16) 2008년 현재 ‘4·19민주혁명회’(1964)는 회원 240명과 4개 지부를, ‘4·19혁명희생자유족회’(1966)는 회원 142명과 3개 지부를, ‘4·19혁명공로자회’(1970)는 156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3개 단체를 통합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표 2〉 4월혁명 기억의 조직적 분화: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 4월혁명의 지역적 구성 |    | 주요 관련단체 현황   |
|--------------|----|--|
| 2·28민주운동     | 대구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4·19민주혁명대구경북동지회   |
| 3·15의거       | 미산 | 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희생자유족회,<br>3·15의거부상자회, 4·19민주혁명미산·경남연합지부,<br>4·19혁명희생자유족회경남지부, 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 |
| 4·19혁명       | 광주 | 4·19민주혁명회광주·전라연합지부,<br>4·19혁명희생자유족회광주·전라연합지부,<br>광주4·19혁명기념사업위원회                             |
|              | 부산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4·19민주혁명회부산지부,<br>4·19혁명희생자유족회부산지부  |
|              | 서울 |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br>4·19육영사업회, 4월회, 사월혁명회, 4월포럼, 4·19선교회                 |

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나, 자원동원에 있어 국가의 영향력이 적지 않은 만큼 사실상 정치활동의 자율성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sup>17)</sup>

## 2) 혁명기억의 제도화 경로

민주화운동으로서 4월혁명은 사회적 기억으로부터 형성·공유된 고유한 상징체계를 갖고 있다. 4월혁명의 상징체계에는 민족, 민주, 자유의 이념적 가치와 반독재, 반부패,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의미가 내면화되어 있다. 4월혁명의 상징체계를 통해 국가권력은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지배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하려 했으며, 사회운동은 4월혁

17) 하지만 모든 4월혁명 관련단체들이 민관협동형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사월혁명연구소' (1988년)의 후신인 '사월혁명회' (1998년)를 들 수 있다. '사월혁명회'는 2008년 현재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80여 명의 진보적 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학술사업을 중심으로 진보적 사회운동단체들과 연계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오고 있다.

명의 이념적 가치를 기억투쟁의 방식으로 전승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인지적·실천적 동원전략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실제로 4월혁명의 정치적 의미는 박정희정권하에서 5·16쿠데타에 의한 권력장악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문민정부에게는 기존 군부정권들과의 차별적인 정통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왔다. 박정희가 1963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연설한 아래의 내용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최초로 4월혁명의 기억이 정치적으로 상징화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열화 같은 민주적 신념은 4월혁명에서 독재를 물리쳐, 민주주의를 수호하였고, 이어 5월혁명으로 부패와 부정을 배격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되찾아 … 4·19와 5·16의 혁명이념을 계승하고 당위적으로 제기된 민족적인 과제를 수행할 것을 목표로 … 범국민적 혁명대열에의 적극적 호응과 열성적인 참여 있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sup>18)</sup>

이처럼 박정희는 4월혁명의 기억으로부터 반독재와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의미를 형식적으로 상징화함으로써 지배권력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취약한 권력기반의 정통성을 창출하려 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5·16이라는 ‘자신의 혁명’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서 4월혁명을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당시 운동세력들이 4월혁명의 기억에서 계승하려했던 이념적 가치는 민족자주와 사회민주의 혁명정신이었기 때문이며, 궁극적으로는 이 같은 상반된 두 개의 혁명이 나란히 공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임대식(2003, 329)의 지적처럼, “5·16은 합법적 권력을 무력으로 전복한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을 의미했고, 혁명공약에서의 친미반공과 이후 일련의 반공체제 강화조치에서 드러나듯이 민족주의와 평등주의를 부정”했다. 박정희정권하에서 4월혁

---

18) 1963년 12월 17일, <제5대 대통령 취임사>.

명이 ‘의거’로 축소되고,<sup>19)</sup> 3·15의거 기념사업이 4·19혁명 기념사업보다 앞서 이루어진 배경이 여기에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박정희에 의해 추진된 4월혁명 기념사업은 혁명의 열기를 잠재우고 박제화해 과거 완결형으로 가두어버리기 위한 일시적인 포섭전략이었던 것이다. 1965년 박정희는 당시 한일회담반대운동으로 심화된 4월혁명의 기억투쟁이 자신의 지배권력에 대항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보였다.

해마다 4월만 들어서면 학구에만 전념해야 할 학생들의 일부가 꼭 정치에 간여해야만 하겠다는 풍조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근대화니 민주화니 하는 것도 결국 빈말이 되고 만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의 할 일이 따로 있고, 정치인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모든 국민은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 연례행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상 싶은 일부학생들의 지나친 정치참여가 헌정질서나 경제건설을 파괴하고 … 지성이 메말랐다는 오늘의 깊은 성찰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sup>20)</sup>

다른 한편 사회운동은 4월혁명의 기억투쟁을 통해 운동의 동원전략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4월혁명의 기억투쟁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기념일에 그리고 기념공간에서 이른바 기념시위의 형태로 전개되어왔다.<sup>21)</sup> 4월혁명을 둘러싼 기념시위는 특히 학생운동을 주축으로 이루

19) 4월혁명은 1962년 개정된 3공화국 헌법 전문에 처음으로 ‘4·19의거’로 명명되었다. 1973년 3월 법정기념일로 제정, 이후 1980년 10월 5공화국의 헌법 개정과정에서 언급되지 않다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다시 ‘4·19’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1994년에 정부가 그 명칭을 혁명으로 격상시킨다는 발표가 있는 후, 4·19의거는 ‘4·19혁명’으로 공식화되었다.

20) 1965년 4월 19일, 〈4·19의거 제5주년 기념일 기념사〉.

21) 예컨대 6월항쟁이 일어났던 해인 1987년 4월 19일, 4·19혁명 27주년 기념행사는 전두환정권의 ‘4·13조치’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로 이어졌다. 이날 시위에 전투경찰 15개 중대 2천 5백여 명의 무장병력이 투입되었으며, 3천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 중에서 총 358명(학생 289명)이 연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말』 제11호(1987/5)를 참조할 것.

어졌는데, 이는 4월혁명과 학생운동의 긴밀한 역사적 관계에 기인한다. 즉 “학생운동의 원류는 4·19에서 찾을 수 있으며, 4·19학생운동은 이후의 학생운동의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학생운동가 역시 자신의 역사적 정당성을 4·19에서 구가해왔기 때문이다(김동춘 1988, 33).” 4월혁명 제1주기부터 줄곧 학생운동이 정부주도의 기념행사에 편입하지 않고 기념시위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행사를 추진해왔던 역사적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로 접어들어 문민정부에 의해 본격화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재평가는 4월혁명의 제도화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다 주었다. 문민정부는 기존의 정부형 기념사업 구조에 민주화운동의 사회적 기억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통해서—3당합당에 의한 정권창출이라는 정치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이로써 문민정부의 출범 이전에 크게 정부주도와 민간주도로 이원화되어 추진되었던 4월혁명의 기념행사가 제도적 공간의 확장을 계기로 ‘민관협동형’의 형태를 중심으로 확대·재편되기 시작했다. 이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평가 및 관련법규의 제정을 통한 자원동원 구조의 확장과 함께 시민사회에서도 비정부적 부문의 조직적 확대와 담론의 활성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4월혁명의 제도적 확장은 국가와 사회운동에 확연히 다른 정치적 결과로 이어졌다. 국가는 4월혁명의 제도화를 통해 기존 군부정권들과의 차별적인 정통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가권력의 헤게모니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 반해, 사회운동은 ‘상징에서 동원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제도적으로 분산·확장되면서 동원전략의 강도가 급속히 약화되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국가로부터의 정치적 기회구조와 시민사회로부터의 사회적 기회구조가 상호작용하면서 제도적으로 확장된 기억의 정치과정이 내포하고 있는 기회와 위기의 이중성을 반영하고 있다. 즉 4월혁명 기억의 제도적 확장은 기회라는 측면에서 4월혁명의



기억을 안정적으로 기념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준데 반해, 위기의 측면에서는 사회운동의 기억투쟁을 제도적으로 확장된 정치과정으로 유인함으로써 동원전략의 강도와 효과를 분산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4월혁명의 제도화가 가져온 사회적 결과를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4월혁명 제도화의 사회적 결과에 대한 비판적 탐색은 ‘제도화의 역설’이라는 맥락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 5. 제도화의 역설

### 1) 기억의 정치적 독점과 운동주체의 주변화

4월혁명의 기억을 둘러싼 정치과정의 역사에서 가장 침예하게 제기되었던 비판적 쟁점은 운동주체의 정치적 제도화이다. 소위 혁명주역이라고 칭송되었던 운동주체들의 정치적 분화는 4월혁명세대가 안고 있는 핵심적 쟁점을 이룬다. 4월혁명에 참여했던 운동주체,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졌던 주도세력들의 정치적 분화와 제도화에 따른 ‘혁명기억의 정치적 독점’은 4월혁명을 그들만의 기억으로 간주함으로써 나머지 운동주체들의 주변화를 초래했다.

주지하다시피 4월혁명세대들은 1960~70년대의 사회변동 과정에서 일부는 변혁운동의 흐름을 이어간 반면, 대다수의 운동주체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체제 적응훈련을 거쳐 유신선포를 지지하는 집단행동을 통해 대대적으로 지배권력에 편입하기 시작해 1980년대 신군부의 정치권력에서 중추적 기능을 맡아 제도정치의 핵심인사로 도약했다. 또한 보수야당을 통해 제도정치의 영역으로 진입했던 사람들도 1990년 3당합당 과

정에서 지배권력의 내부로 편입되었고, 체제에 편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혁당, 통혁당, 민청학련, 남민전 사건 등에 연루되어 희생되거나 옥고를 치렀다(하일민 1992, 282-284). 그리고 여전히 여러 부문에서 사회운동에 몸담고 있으면서 4월혁명의 상징적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혁명세대들이 있다. 요컨대 대학생이란 신분으로 4월혁명을 주도했던 핵심세력들은 한편으론 정계진출이라는 운동주체의 정치적 제도화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야를 중심으로 사회운동의 세력화를 이끄는 등 일련의 정치적 분화를 경험했다. 이런 측면에서 4월혁명의 기억은 당시의 운동주체들에게 실천적 구심력을 부여했다기보다 오히려 제도정치와 재야정치, 그리고 비정치적 인 일상의 영역으로 운동주체들을 분산시키는 힘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혁명의 주역들에게 4월혁명의 기억은 자신의 당대 신념과 결합되어 정치적 선택과 결정을 정당화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치적 도구로 기능했다.

하지만 대학생을 혁명의 주역으로 상징화해온 사회적 기억장치들과 혁명세대의 집합적 정체성에 내재된 동질적 감수성은 나머지 운동주체들의 가치와 의미를 축소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대학생들의 주도적 참여가 4월혁명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학생을 주축으로 상징화된 혁명세대의 정치적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혁명의 기억은 정치영역을 중심으로 전유되었다. 특히 4월혁명의 공간에서 죽음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의 계급적 분포를 살펴보면, 이처럼 대학생으로 특권화된 혁명세대의 정치화된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실제로 도시에서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하위계급, 특히 많은 실업자들과 노동자계급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Kim 1996, 1190).<sup>22)</sup>

결국 혁명의 주역들이 4월혁명의 기억을 통해 정치주체로서의 제도

22) 이와 관련해 사망자 186명 가운데, 서울이 과반수를 넘어 56%이고 경상남도가 19.5%이며 나머지는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초등학생이 3%, 중학생 10%, 고등학생 16%, 대학생 13%,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어른이 모두 56%였다. 특히 성인 56% 가운데 실직자

화라는 성공을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이는 동시대의 나머지 운동주체들을 주변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sup>23)</sup> 정치적으로 제도화된 혁명의 주역들은 나머지 운동주체들로부터 멀어지는 대가로 혁명기억을 기념사업의 형태로 제도화하는 데 후원자 역할을 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4월혁명 기억의 제도적 확장은 4월혁명세대들의 정치적 분화가 가져온 결과의 일부로서 운동주체의 주변화라는 한계를 내재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2) 기념의 형식주의와 담론의 위기

4월혁명의 제도적 확장은 기념의 형식주의라는 비판적 쟁점을 야기했다. 기념의 형식주의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을 듯하다. 하나는 4월혁명의 기억이 기념의 행위와 구조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식의 과잉’이며, 또 다른 하나는 담론질서의 성격변화에서 두드러진 ‘담론의 위기’라는 지배적 경향이다. 다시 말해 기념의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적 쟁점은 4월혁명을 에워싼 기억운동의 내용과 형식의 불균형, 즉 형식이 내용을 압도하는 혹은 내용이 형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으로부터 제기된다.

우선 형식의 과잉은 기념사업의 외연이 확장됨에도 불구하고 4월혁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줄어드는 현상을 반증하고 있다. 예컨대 기념사업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해 4월

---

는 16%, 취업자는 40%로 직장에 다니는 이들의 참여와 희생이 컸음을 보여주고 있다(Kim 1983, 7; 박영신 2000, 196에서 재인용).

23) 하지만 민주화운동의 세대회로를 이어가는 길목에서 1980년 5·18민중항쟁과 1987년 6월항쟁을 경험한 이른바 386세대의 정치권 진입으로 4월혁명세대들은 제도정치 영역에서도 빠르게 주변화되기 시작했다. 2000년과 2004년 총선에서 386세대의 등장과 민주화운동의 세대 분화가 제도정치에 영향을 미쳐 4월혁명세대의 때 이른 정치적 퇴조를 가속화시켰다. 이는 사회운동의 세대분화가 제도정치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혁명 기념일에 4·19묘지를 찾는 참배객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4월혁명 10주년의 1970년에 3만여 명에서 20주년의 1980년에는 7천여 명으로, 1990년 30주년에는 6천여 명으로, 그리고 40주년인 2000년에는 1천 2백여 명으로 급속히 감소했다. 또한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 이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기념건물, 공원조성 등 공간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기념사업들이 거대화를 향해 획일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어쩌면 기념사업의 과잉팽창에 따른 형식의 과잉은 잘못된 해석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는 담론의 위기에 있는 것 같다. 즉 기념사업의 외연적 확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담론의 위기가 더 큰 문제일는지 모른다.

4월혁명을 둘러싼 담론의 위기는 여러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4월혁명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이념갈등의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4월혁명의 역사와 기억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미흡하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게 만든다. 대표적으로 뉴라이트교과서포럼이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4월혁명을 ‘4·19학생테모’로 폄하,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고, 보수단체들이 “이승만 동상을 광화문에 건립하자”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4월혁명의 의미와 가치를 왜곡·축소하려는 움직임들은 4월혁명에 대한 역사인식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4월혁명의 역사를 변질시키려고 시도하는 사회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담론의 위기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4월혁명의 기억을 운동문화를 통해 전통적으로 계승해왔던 대학에서까지 담론의 위기를 넘어 담론의 상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4월혁명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는 데에는 대학에서조차도 4월혁명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4월혁명은 몇몇 대학에서 기념일에, 그리고 따분한 교양과목 강의시간에나 들어봄직한 아주 오래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셋째, 기념사업의 측면에서 4월혁명의 ‘기억을 돕는’ 장치들에 자원을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심과 담론의 재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하지만 기억을 돕는 장치들 그 자체에 의미가 부여될수록 4월혁명이라는 원초적 사건에 대한 의의와 가치가 사장되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오늘날 4월혁명을 원초적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4월혁명을 경험한 60~7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이다. 혁명기억의 세대전승은 기념사업의 공간적·형식적 외연확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혁명기억의 주체성을 복원하고 담론의 객관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월혁명의 역사와 기억을 정상화하는 작업은 공간 중심의 정태적 형식에서 벗어나, 역사 왜곡의 사회세력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역동적인 담론의 사회적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담론 없는 형식주의는 공허할 뿐이다.

## 6. 결론: 기억의 제도화와 민주화 사이에서

민주화운동으로서 4월혁명은 지난 반세기 동안 다양한 의미해석의 과정을 거쳐 왔다. 비록 오랜 기간 동안 군부정권이 정치적 망각을 유도하고 때로는 지배권력의 눈으로 역사적 사실을 변조하기도 했지만, 4월혁명은 그 역사적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어 왔던, 최초로 거대한 대중권력의 폭발력을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었음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4월혁명이 열어놓은 정치적 공간은 지지기반이 취약한 새로운 체제의 불안정성, 파행적 정당정치, 혁명주체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세력화와 정치적 대안의 부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5·16쿠데타에 의해서 1년여 만에 닫히게 되었다.<sup>24)</sup> 이러한 조건 속에서 4월혁명이 남긴 유산은—혁명기억의 정치적 독점을 통해 지배권력에 편입한 혁명주도세력들을 제외하고

는—제도정치 영역에 흡수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기억과 상징적 수준에서만 계승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문민정부에 의해 본격화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재평가와 이를 계기로 이루어진 기념사업의 제도적 확장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과연 4월혁명의 원초적 기억을 안정적으로 계승하고자 했던 기억운동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기억운동의 성공과 실패는 사회운동처럼 구조적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때, 4월혁명의 기억운동은 제도화의 사회적 결과에서 나타난 운동주체의 주변화와 기억의 정치적 독점 그리고 기념의 형식주의와 담론의 위기로부터 제기되는 비판적 쟁점을 내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회적 기억의 제도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고민하게 된다. 사회적 기억의 민주화 없는 제도화는 형식의 과잉과 기억의 정치적 독점을 불러일으키며, 제도화 없는 민주화는 안정적·공식적 틀의 바깥에서 기억의 불안정성과 담론의 혼돈만 가져올 뿐이기 때문이다.

기억의 제도화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원초적 기억들을 교육, 법률, 조직, 문화와 같은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공식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억의 운동을 틀 짓는다. 넓은 의미에서 기억이 규범체계라는 제도 안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담론지형이 구축되고 그 안에서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상징적 의미와 가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같은 기억의 제도화는 기념이라는 형태로 사회적 가시성을 갖게 된다.

기억의 민주화는 기억 자체가 역사구성의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역사적 진실을 둘러싼 기억과 담

---

24) 4월혁명에서 2공화국을 거쳐 5·16쿠데타에 이르는 급격한 정치변동의 동학에 관해서는 한승주(1983), 유재일(1994), 최장집(1996), 박명림(1996), 이국영(1996) 등의 논의를 참고할 것.

론의 정치적 소통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억의 민주화는 기억의 주제, 내용, 방식, 즉 누구의 기억인가, 어떤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가, 어떻게 기억하는가의 문제를 놓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 원활히 작동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억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차원에서 담론지형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국가권력의 부당한 정치개입이 차단된 열린 정치적 소통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억을 둘러싼 민주화는 제도화에 선행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화는 기억의 민주화가 가져온 구성물들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월혁명을 흔히 ‘미완의 혁명’ 이라고 표현한다. 미완의 혁명은 말 그대로 끝을 다 맺지 못한, 즉 ‘자기 완결성을 갖지 못한 혁명’ 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4월혁명 이후 혁명의 기억이 제도화되는 역사적 경로와 정치과정의 성격을 탐색하면서, 4월혁명이 현재적 지평 위에서 재구성되는 작동양식과 사회적 결과를 논의하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미완의 혁명’ 은 다른 측면에서 독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것은 4월혁명 이후의 4월혁명이 기억의 민주화를 소홀히 하면서 제도화되었다는 평가에서 비롯된다. 필자는 기억의 민주화를 통해 미완의 혁명에 역사적 완결성을 채워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여전히 원초적 사건으로서 4월혁명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존재와 4월혁명의 기억과정성을 계승하려는 기억운동에 달려 있다. ~~다~~

## 참고문헌

- 강만길 외. 1983. 『4월혁명론』. 한길사.
- 강정구. 1998. “4월혁명과 현대계 자주·민주·통일의 과제.” 『경제와 사회』 제39권. 206-232.
- 고성국. 1991. “4월혁명의 역사적 부정으로서의 5·16쿠데타.” 이종오 외.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태암.
- 김광식. 1988. “4·19시기 혁신세력의 정치활동과 그 한계.” 『역사비평』 통권 2호. 131-160.
- 김동춘. 1988.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4·19시기 학생운동.” 『역사비평』 통권 3호. 31-48.
- . 1991. “4·19혁명의 역사적 성격과 그 한계.” 이종오 외.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태암.
- 김성환. 1984. “4·19혁명의 구조와 종합적 평가.” 김성환 외. 『1960년대』. 거름.
- 김수진. 1996. “제2공화국의 정당과 정당정치.” 백영철 편.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나남.
- 김영명. 1999. “4·19와 장면 내각.” 『고쳐쓴 한국 현대 정치사』. 을유문화사.
- 김영범. 1998. “집합기억의 사회사적 지평과 동학.” 지수종 외. 『사회사연구의 이론과 실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 2003. “기억에서 대항기억으로, 혹은 역사적 진실의 회복: 기억투쟁으로서의 4·3 문화운동 서설.” 『민주주의와 인권』 제3권 2호. 67-104.
- 김일영. 1991. “4·19혁명의 정치사적 의미.” 이종오 외.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태암.
- 문병주. 2005. “제2공화국 시기의 ‘좌절된’ 민주주의와 현재적 함의: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2호. 5-37.



- 민주화운동백서편찬위원회. 2005. 『민주화운동백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박명림. 1996. “제2공화국 정치균열의 구조와 변화.” 백영철 편.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나남.
- 박영신. 2000. “사회 운동 ‘이후’의 사회 운동: ‘4·19’의 구성.” 『현상과 인식』 통권 82호. 183-203.
- 박현채. 1988. “4·19시기 노동운동의 전개와 양상.” 『역사비평』 통권 2호. 161-179.
- 박형신. 1986. 『한국사회의 구조와 4월혁명, 1945-1960: 4월혁명에 대한 사회구조사적 접근』.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논문.
- 백낙청. 1980. “4·19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성.” 『창작과 비평』 통권 56호. 2-16.
- 사월혁명연구소 편. 1990.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1』. 한길사.
- \_\_\_\_\_. 1993.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2』. 한길사.
- 서중석. 1991. “4월혁명운동기의 반미·통일운동과 민족해방론.” 『역사비평』 통권 16호. 128-167.
- 안병직. 2005. “과거청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안병직 외.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역사.
- 유재일. 1994. “제2공화국의 사회갈등과 정치변동.” 강만길 외. 『한국사 17: 분단구조의 정착 1』. 한길사.
- 이국영. 1996. “제2공화국의 실패요인과 군부권위주의의 등장.” 백영철 편.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나남.
- 이재봉. 1996. “4월혁명, 제2공화국, 그리고 한미관계.” 백영철 편.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나남.
- 이종오. 1991. “4월혁명의 심화발전과 학생운동의 전개.” 이종오 외.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태암.
- 이철국. 1988. “4·19시기의 교원노동조합운동.” 『역사비평』 통권 2호. 180-206.
- 임대식. 2003. “1960년대 초반 지식인들의 현실인식.” 『역사비평』 통권 65호. 301-

336.

- 정근식. 1999. “사회운동과 5월의례, 그리고 5월축제.” 정근식 편. 『축제, 민주주의, 지역 활성화』. 새길.
- \_\_\_\_\_. 2002. “과거 청산의 역사사회학을 위하여: 한국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사회와 역사』 제61권. 11-52.
- \_\_\_\_\_. 2005. “항쟁기역의 의례적 재현: ‘5월행사’와 전야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1호. 5-33.
- 정호기. 2004.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정치·사회적 과정과 자원 동원.” 『한국사회학』 제38집 2호. 221-247.
- \_\_\_\_\_. 2005. “기념관 건립운동의 변화와 동학: 민주화운동 기념관들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65호. 226-250.
- \_\_\_\_\_. 2007. “저항의례의 국가화와 계승 담론의 정치.” 『경제와 사회』 통권 76호. 10-38.
- 최장집. 1996. “제2공화국하에서의 민주주의의 등장과 실패.” 백영철 편.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나남.
- 하일민. 1992. “전쟁세대의 좌절과 4월혁명세대의 두 가지 길.” 『역사비평』 통권 20호. 274-284.
- 한승주. 1983.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종로서적.
- 홍일표. 2007. 『기रो에 선 시민입법: 한국 시민입법운동의 역사·구조·동학』. 후마니타스.

Alonso, Ana Maria. 1988. “The Effects of Truth: Re-Presentations of the Past and the Imaging of Community.” *Journal of Historical Sociology* 1(1): 33-57.

Burke, Peter. 1989. “History as Social Memory.” In Thomas Butler (ed.). *Memory: History, Culture and the Mind*. New York: Basil Blackwell. ch: 5.

Elder, Charles D., and Roger W. Cobb. 1993. 『상징의 정치적 이용』. 유영옥 옮김.

홍익재.

- Eyerman, Ron. 2004. "The Past in the Present: Culture and the Transmission of Memory." *Acta Sociology* 47(2): 159-169.
- Foucault, Michel. 1977. *Language, Counter-Memory, Practice: Selected Essays and Interviews*. Donald F. Bouchard (e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Gamson, William A., and David S. Meyer. 1996. "Framing Political Opportunity." In Doug McAdam,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 12.
- Goodwin, Jeff, and James M. Jasper. 1999. "Caught in a Winding, Snarling Vine: The Structural Bias of Political Process Theory." *Sociological Forum* 14(1): 27-54.
- Halbwachs, Maurice. 1971. *La Topographie Légendaire des Évangile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Hirsch, Herbert. 1995. *Genocide and the Politics of Memory: Studying Death to Preserve Life*.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Hobsbawm, Eric. 2004. "대량 생산되는 전통들: 유럽, 1870~1914." Eric Hobsbawm 외. 『만들어진 전통』. 박지향 · 장문석 옮김. 휴머니스트.
- Kaye, Harvey J. 2004. 『과거의 힘: 역사의식, 기억과 상상력』. 오인영 옮김. 삼인.
- Kim, Quee-Young. 1993. *The Fall of Syngman Rhe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 \_\_\_\_\_. 1996. "From Protest to Change of Regime: The 4-19 Revolt and the Fall of the Rhee Regime in South Korea." *Social Forces* 74(4): 1179-1208.
- Koopmans, Ruud. 1999.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Some Splitting to Balance the Lumping." *Sociological Forum* 14(1): 93-105.

- Kriesi, Hanspeter. 2004. "Political Context and Opportunity." In David A. Snow, Sarah A. Soule and Hanspeter Kriesi (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Social Movements* Malden, MA: Blackwell. ch: 4.
- McAdam, Doug. 1996. "Conceptual Origins, Current Problems, Future Directions." In Doug McAdam,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 1.
- Meyer, David S., and Debra C. Minkoff. 2004. "Conceptualizing Political Opportunity." *Social Forces*82(4): 1457-1492.
- Olick, Jeffrey K., and Joyce Robbins. 1998. "Social Memory Studies: From "Collective Memory" to the Historical Sociology of Mnemonic Practices." *Annual Review of Sociology*24: 105-140.
- Schwartz, Barry. 1982. "The Social Context of Commemoration: A Study in Collective Memory." *Social Forces*61(2): 374-402.
- \_\_\_\_\_. 1996. "Memory as a Cultural System: Abraham Lincoln in World War II." *American Sociological Review*61(5): 908-927.
- Schwartz, Barry, and Howard Schuman. 2005. "History, Commemoration, and Belief: Abraham Lincoln in American Memory, 1945-2001." *American Sociological Review*70(2): 183-203.
- White, Leslie A. 1940. "The Symbol: The Origin and Basis of Human Behavior." *Philosophy of Science*7(4): 451-463.

「4·19묘역 성역화 계획」, [http://www.pa.go.kr/usr/cms/pre\\_0303\\_01detail.do](http://www.pa.go.kr/usr/cms/pre_0303_01detail.do)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5차 일부개정 2008. 03. 28 법률 제9079호).

「대한민국헌법」(제9차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3차 일부개정 2007. 01. 26 법

를 제8273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차 일부개정 2010.03.12 법률 제10053호).

투고: 2010.4.13 심사: 2010.5.16 확정: 2010.5.20